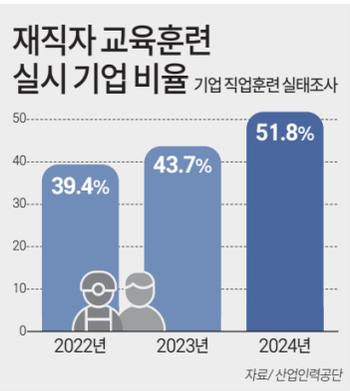


# 직업훈련 실시 기업, 3년 연속 늘어 근로자 79% “직무능력 향상 체감”

산업인력공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대응 기업, 훈련비 지원 확대 등 주된 자기계발 지원은 9.6%에 그쳐



기업의 직업훈련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인 가운데,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 10명 중 약 8명은 직무능력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직자의 자기계발 지원을 하는 회사는 10곳 중 1곳이 되지 않아 근로자의 자율적인 자기계발 지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3일 발표한 ‘2025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교육훈련을 경험한 근로자의 78.6%가 ‘직무능력 향상’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생산성 향상(58.0%), 동기부여 및 사기 제고(53.8%), 평판 제고(36.4%), 이직 방지(31.5%) 순으로 나타나, 기업 훈련이 인적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비율은 2022년 39.4%, 2023년 43.7%, 2024년 51.8%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기업 주도 훈련은 확대되는 반면, 개인의 자율적 역량 개발은 여전히 제한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제도 인지도는 59.6%, 활용 비율은 21.7%로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다만 기업들은 훈련비 지원 확대(51.1%), 시설·장비 지원(48.2%), 인력 공백 지원(45.3%), 행정절차 간소화(38.1%)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김규석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가 최근 3년간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는 전국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기업의 훈련 투자와 실적 등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공표 결과는 2024년 기준 4500개 기업 표본의 훈련실태를 2025년 하반기 조사한 결과다. 이번 보고서는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농지은행’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 지원

농어촌공, 애로해소·효율화 총력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재의 영농 진입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농지은행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농지은행에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0개에 달한다. 그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공사는 전문상담사를 활용해 청년농의 농지은행 활용을 돕고 있다. 사내 자격시험을 거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직원을 농지은행 전문상담사로 선발해 배치했다. 전문상담사는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계약 마무리·연장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청년농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또 청년농이 경작지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할 때, 기존 보유 농지와 인접한 농지에 매입 우선순위를 부여해 농지를 집산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30여 헥타르(ha)의 농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영농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경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며 청년농의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영농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익숙한 환경에서 영농을 이어가길 원하는 청년농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먼저 스마트팜 온실 난방 시설을 유류 난방에서 전기 난방으로 전환했다.



전남 나주에 설치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시스템. /뉴스

올해부터 스마트팜에 전기 난방 시설을 설치 후 임대할 예정이다. 이에 청년농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연간 1200만원 상당의 경영비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임차 계약 종료 후 해당 스마트팜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농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익숙한 환경에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는 올해도 청년농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현장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청년농 협의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청년농은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자 미래 식량 안보를 책임질 인적기반”이라며 “청년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청년농이 우리 농업의 주역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대상지 15곳 추가

이천 송말지구·괴산 금산지구 등 선정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 지원 난개발 시설 정비·인구유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국내 15개 지구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15곳은 ▲경기 이천 송말지구 ▲충북 괴산 금산지구 ▲충북 영동 어촌지구 ▲충북 진천 사석지구 ▲충남 당진 상오지구 ▲전북 고창 사저지구 ▲전남 장흥 진북지구 ▲경북 문경 불암지구 ▲경북 영덕 강구금호지구 ▲경남 김해 봉림지구 ▲경남 의령 가미지구 ▲경남 의령 대신지구 ▲경남 하동 신흥지구 ▲경남 함양 거면인당지구 ▲경남 합천 장대지구이다.

지난 2021년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및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

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효과,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15곳에는 작년 농촌협약을 통해 예비선정한 문경, 합천 등 8곳도 포함됐다.

난개발 시설을 정비(철거)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 등을 위해 귀농귀촌주거·실습공간, 임대주택 등 재생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촌공간계획을 본격 수립 중이다. 이에 맞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이천, 진천, 문경, 영덕 등 4곳이다.

진천군(사석지구)의 경우 진천읍의 농촌다움 복원을 위해, 악취 등으로 정

주환경을 해치는 주택 인근의 축사 2개소와 폐축사 1개소를 정비한다.

향후 연계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 조성을 통한 자립형 농촌마을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영덕군(강구금호지구)은 주거밀집지역에 주거와 혼재돼 악취,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는 가공 공장을 인근 농공단지로 이전한다. 기존 시설이 있던 공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쉼터와 공동주차장 등을 조성해 주거지와 공업지의 효과적인 공간 재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7월 금강 유역에 설치된 ‘보’를 찾아 녹조발생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

## 4대강 재자연화... 2028년까지 개선 목표

기후부, 낙동강 하류 4개 보부터 속도 금강산·영산강 등 2027년 이행 계획

정부와 환경단체가 4대강의 이른바 ‘재자연화’ 추진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간 설치된 ‘보’ 등의 해체를 통해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다. 금강 등 4대강의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후부는 우선 여름철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류 4개 보부터 속도를 내기로 환경단체와 뜻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16개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회·경제적 분석 용역을 진행하되, 올해 9월 중간 점검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결론 도출이 가능한 보는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외의 보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토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 등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그에 따른 처리 방안을 마련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

리 방안이 마련된 보를 대상으로, 금강과 영산강 수계 중에서 물 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2027년 상반기부터 처리 방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자연화 방안 민관 협력 논의기구에 대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에서 다루거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실무 논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두고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녹조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참여에 충분한 시료와 조사 횟수를 확보해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녹조 문제 해소 대국민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논의는 4대강 재자연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등대 주제 사진·그림·동시 공모전 진행”

해수부-항로표지기술원, 공모전 열어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등대를 주제로 한 ‘등대해양문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등대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

됐다.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18일이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관련 콘텐츠 공모전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동시 부문을 새롭게 추가했다.

공모는 사진, 그림, 동시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등대와 바다를 주제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출품수는 사진 5점, 그림 2점, 동시 3점까지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사진은 제한이 없고, 그림은 초·중·고등학생, 동시는 초등학교생으로 제한된다.

수상작은 6월 26일 발표된다. 사진과 그림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수부장관상과 상금(사진 300만 원·그림 100만 원)이 수여된다. 동시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세종=김연세 기자